

제39권: 2007. 2. 16.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 동 원 박 혜 진

1. 개요	1
2. 농산물 시장개방	2
3. 식량안보와 농산물 안전성	7
4. 농업·농촌의 가치	9
5.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기대	10
6. 시사점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김동원** 부연구위원 02-3299-4227 dongweon@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히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개요

DDA 다자간 협상과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농업이 국가 통상정책의 주요이슈로 다루어지고 사회적 관심도 그만큼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황인식에는 괴리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농업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당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농업인 의식조사를 2006년에는 일반국민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857건 회수) 도시민은 면접조사를, 농업인은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산물 시장개방, 농산물 안전성, 농업 가치 인식 등이었으며, 그 가운데 특징적인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 도시민(응답자 1,500명): 광역도시 47.4%, 중소도시 5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2.53% point>
- 농업인(응답자 857명): 60세 이상 54.3%, 60세 미만 36.8%
<당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연구활용 목적으로 구성된 독농가로 각 특성별 분포는 농촌사회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2. 농산물 시장개방

‘농산물 시장 보호돼야’ 도시민 60.7%가 공감

도시민과 농업인은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국내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식(도시민 60.7%, 농업인 69.8%)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민의 경우 어느 정도 개방이 불가피 하다거나 적극 개방해야 한다는 견해도 39.2%에 달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수준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

표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의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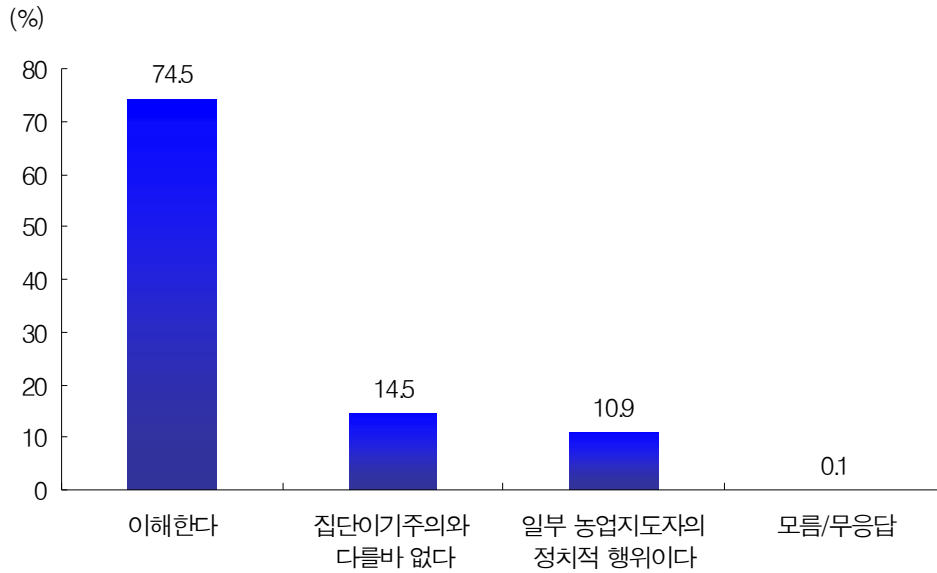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더 이상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안된다	362	24.1	174	20.3
국내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549	36.6	424	49.5
농산물 시장개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500	33.3	228	26.6
농산물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89	5.9	24	2.8
모름/무응답	-	-	7	0.8
계	1,500	100.0	857	100.0

도시민 74.5%는 ‘농산물 시장개방 반대하는 농업인 이해’

도시민들은 농업인이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74.5%가 ‘이유있는 태도이므로 이해한다’고 응답해 일부 언론보도에 비추어진 비판 여론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 개방 반대를 이해한다는 계층은 20~30대 젊은층과 고학력층, 학생과 화이트칼라 직업군, 대도시 거주 도시민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림 1. 농업인의 농산물 시장개방 반대에 대한 도시민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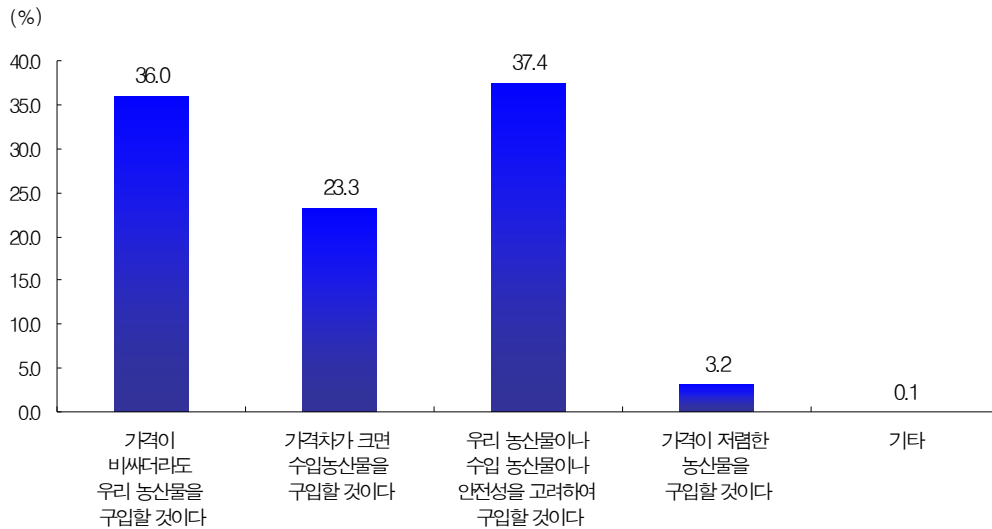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 구입’ 36.0%에 그쳐

도시민들은 우리 농업과 농산물시장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이런 의식이 바로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도시민 36.0%는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였으나, 국산이나 수입산 가리지 않고 안전성(37.4%)과 가격(26.5%)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배에 달해 실리 중심으로 농산물을 선택할 뜻을 비쳤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 피해보상 분담 의향에는 47.9%가 ‘분담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절반정도(45.4%)는 ‘피해액의 일부를 분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소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다.

그림 2. 도시민의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선택의 조건



개방 대책으로 도시민은 체질강화, 농업인은 소득보장

농산물 시장개방의 불가피성과 일정 수준의 보호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견해가 비슷하지만, 개방에 대한 대응방식이나 대책에는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표 2.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입개방 피해에 대한 우선적인 보상	372	24.8	426	49.7
정부지원도 중요하나 농업인부터 바뀌도록 의식전환 유도	350	23.3	163	19.0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	769	51.3	243	28.4
별다른 대책 필요 없음	9	0.6	7	0.8
기타	-	-	8	0.9
모름/무응답	-	-	10	1.2
계	1,500	100.0	857	100.0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으로, 도시민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가육성(51.3%)이, 농업인은 수입개방 피해에 대한 우선적 보상(49.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농업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시민 23.3%, 농업인 19.0%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보상 방식에도 도시민은 ‘간접보상’(53.2%)을, 농업인은 ‘직접보상’(49.8%)을 주장하였고, 소비자 및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도시민 13.1%, 농업인 21.6%로 견해 차이를 보였다.

표 3.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보상 방식

단위: 명, %

	도시민		농업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부가 피해액을 직접 보상해야 한다	413	27.5	427	49.8
정부가 간접 보상해야 한다	798	53.2	200	23.3
소비자 및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	196	13.1	185	21.6
수혜든 피해든 일반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93	6.2	26	3.0
기타	-	-	4	0.5
모름/무응답	-	-	15	1.8
계	1,500	100.0	857	100.0

향후 농업이 희망을 갖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농업정책’(각 61.1%, 51.7%)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다음 순으로는 도시민은 ‘농업인의 의식전환과 자구책’(20.9%)을, 농업인은 ‘일반국민의 농업보호 의지와 동참’(31.0%)을 들어 부분적으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품질경쟁력’(각 58.9%, 43.6%)과 ‘안전농산물’(각 23.5%, 36.6%)을 꼽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표 4. 우리 농업이 희망을 갖기 위한 조건

단위: 명, %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업인의 의식전환과 자구책	314	20.9	127	14.8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농업정책	917	61.1	443	51.7
일반국민의 농업보호 의지와 동참	264	17.6	266	31.0
기타	5	0.3	11	1.3
모름/무응답	-	-	10	1.2
계	1,500	100.0	857	100.0

농업인 자구노력은 매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화

농업인들의 개방에 따른 자구노력은 더욱 구체화되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응답이 2004년 조사보다 25.9%p 감소한 18.3%인 반면, ‘품질과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습득(25.2%), 농외소득 발굴(20.5%), 대체작목 전환(17.4%), 농사규모 확대(9.7%) 등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언급한 응답 비율이 뚜렷이 증가하였다.

표 5.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농업인의 대응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농사규모 확대	220	9.7
대체작목으로 전환	394	17.4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습득	569	25.2
농사와 병행할 소득거리를 찾는다	463	20.5
농사 포기 후 전직을 위한 준비	55	2.4
개방 진행 상황이나 정부 대책에 따라 적절히 대처	413	18.3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없다	136	6.0
기타	9	0.4
계	2,259	100.0

3. 식량안보와 농산물 안전성

도시민, '식량자급률 훨씬 높여야' 59.5%

도시민 59.5%는 현재 25% 수준인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농업인보다(68.5%) 낮지만 식량자급률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도시민 중에는 현재수준을 유지하면 된다(37.6%), 외국의 값싼 식량 수입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2.9%)는 응답도 10명중 4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도시민의 식량자급률 유지 수준 인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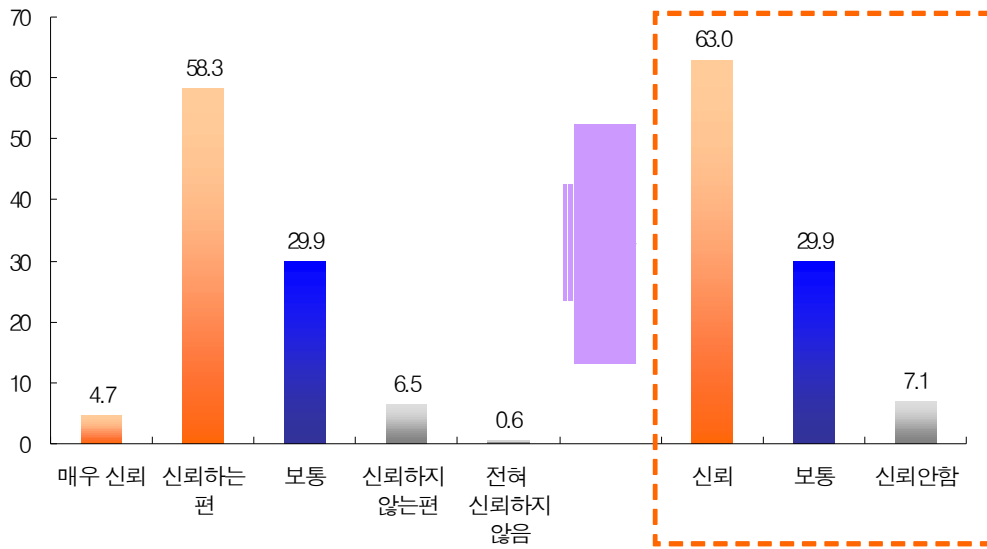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도시민		농업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892	59.5	587	68.5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면 된다	564	37.6	215	25.1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쉽게 수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44	2.9	34	4.0
모름/무응답	-	-	21	2.5
계	1,500	100.0	857	100.0

'미국산 농산물 보다 국산이 안전' 도시민 78.7%가 평가

국산 농산물과 미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비교에서는 도시민(78.7%)과 농업인(73.9%) 대부분은 '국산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했는데, 이 같은 인식은 남자보다 여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고, 직업군 중에서는 주부층에서 우리 농산물 신뢰도가 높았다.

그림 3. 도시민의 국산농산물 안전성 신뢰 수준



이같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도시민들의 국산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63.0%가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1%에 그쳤다.

농산물 구입 시 안전성 우선 고려, 과일은 '맛이 더 중요'

도시민은 또 채소, 육류, 곡물을 구입할 때는 우선 무엇보다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일의 경우에만 안전성(41.9%)보다 맛(45.0%)을 우선해 구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좀 더 높았다.

표 7. 도시민의 농산물 구매 시 우선 고려 사항

단위: 명(%)

분야	채소	육류	곡물	과일
가격	160(10.7)	130(8.7)	150(10.0)	74(4.9)
안전성	909(60.6)	924(61.6)	814(54.3)	628(41.9)
맛	206(13.7)	338(22.5)	264(17.6)	675(45.0)
영양	159(10.6)	96(6.4)	253(16.9)	99(6.6)
포장선별상태	66(4.4)	12(0.8)	18(1.2)	24(1.6)
모름/무응답	-	-	1(0.1)	-
계	1,500(100.0)	1,500(100.0)	1,500(100.0)	1,500(100.0)

4. 농업·농촌의 가치

도시민, 농업·농촌의 역할로 ‘국토의 균형발전’ 중시 경향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앞으로 중요 할 것’이라는 응답이 도시민 88.4%, 농업인은 72.1%로 나타나 농업인 보다 도시민이 농업을 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였다.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에 대한 역할로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으며,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중요성 인식도도 증가하였다.

이밖에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이 늘어났다.

표 8.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의 역할 도시민 인식 변화

단위: %

분야	2004년 오세익 외*		2006년 본 조사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식량의 안정적 공급	38.3	29.5	42.3	36.1
국토의 균형발전	11.1	12.1	24.3	22.8
자연환경 보전	26.4	27.9	10.9	13.7
전통문화의 계승	10.2	8.1	10.8	11.4
관광 및 휴식의 장소	4.8	9.0	7.2	8.0
진원생활의 공간	9.3	13.3	4.4	7.8
기타	-	-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 오세익 외,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90.4%가 인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9명(90.4%)은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비용 추가 부담에는 52.8%만 찬성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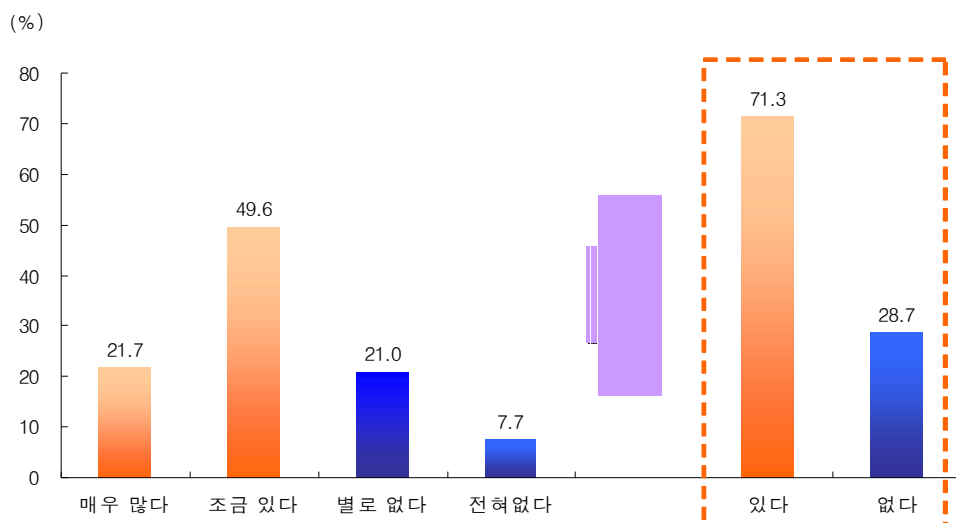
5.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기대

도시민 10명 중 7명, '은퇴 후 농촌에 살고 싶다'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되면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도시민이 응답자의 71.3%('매우 많다' 21.7%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거주 의향을 가진 도시민의 비중은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대별로는 40대가 뚜렷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 계층이, 소득별로는 월 45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농촌 거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61.9%),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17.7%) 순으로 꼽아 농촌 거주 이유가 경제적 조건보다 건강과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되면 농촌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 짓기 위해	23	2.2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43	4.0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662	61.9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25	2.3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70	6.5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189	17.7
땅값과 생활비가 도시보다 싸므로 여유 있게 살수 있어서	55	5.1
기타	2	0.2
계	1,069	100.0

주거·생활환경 만족도 도시민 39.2%, 농업인 25.4%

도시민 응답자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39.2%로 나타났고,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14.8%에 그쳤다.

농업인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아 생활환경 만족도는 25.4%, 삶의 질 수준 만족도는 9.3%에 그쳐 도시민과 인식의 격차를 보였다.

표 10. 주거환경 만족도와 삶의 질 수준 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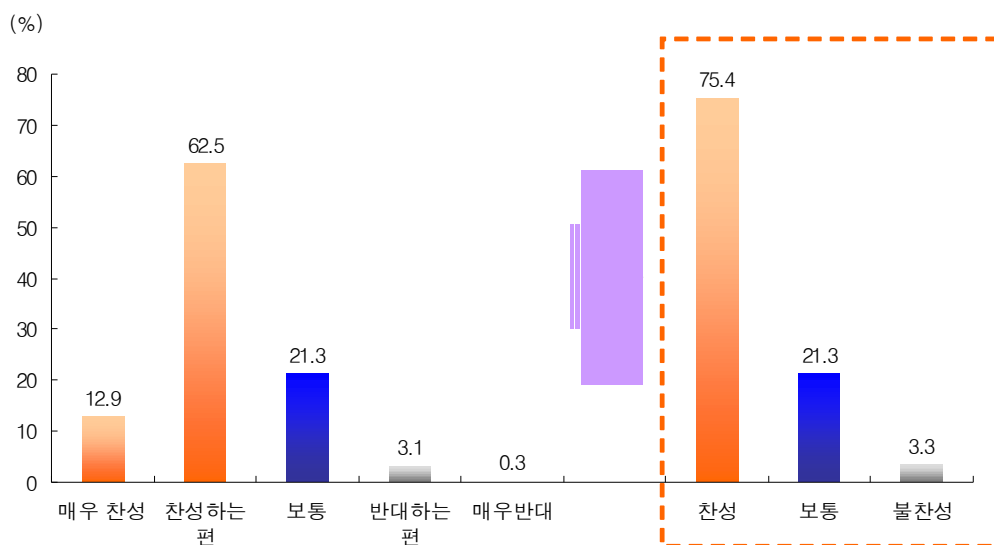
구 분	주거환경 만족도		삶의 질 인식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매우 만족	42(2.8)	24(2.8)	3(0.2)	6(0.7)
만족하는 편	546(36.4)	194(22.6)	219(14.6)	74(8.6)
보통	700(46.7)	467(54.5)	1063(70.9)	485(56.6)
불만족	196(13.1)	123(14.4)	200(13.3)	249(29.1)
매우 불만족	16(1.1)	23(2.7)	14(0.9)	11(1.3)
모름/무응답	-	26(3.0)	1(0.1)	32(3.7)
계	1,500(100.0)	857(100.0)	1,500(100.0)	857(100.0)

농촌지역 우대 복지정책 필요성 86.5%, 예산증액 75.4%가 찬성

도시민 86.5%는 농촌지역의 복지 수준을 감안해 도시보다 우대하는 별도의 농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농촌복지 예산 증액 필요성에도 75.4%가 찬성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5. 도시민의 농촌지역 복지예산 증액 찬성 여부



6. 시사점

이번 조사를 통해 도시민도 농업인 못지않게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도시민 74.5%가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농업인의 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시민 상당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구매나 지원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에 대해서 도시민은 농업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농업인은 소득안정 등 단기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등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의 주거와 생활환경 만족도가 39.2%, 삶의 질 수준 만족도가 14.8%에 그친 가운데, 71.3%가 은퇴 후나 여건이 마련되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의 농촌 정착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유인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